

# 앞아서 산재 예방?...현장도 못가는 근로감독

### 회사 제출 서류만으로 안전점검...산재 사망 20% 줄이기 헛구호 광주·전남 근로감독관 41명 불과...한 명 당 사업장 3100곳 관리 점검 때마다 위반사항 수도둑...잇단 노동자 사망 사후약방문 대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 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현장 안전관리 문제를 판단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류로 안전점검...산재사망 20% 줄이겠다? 정부는 내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내 사망 사고를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현재 산업현장 안전관리시스템은 '헛구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예방 위주의 현장 안전 점검이 아닌, 사고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식 감독에 매달리고 있는 현재 방식으로 산재 예방을 줄이겠다는 당국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산업현장을 돌며 사고의 위험성을 살피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권고하는 게 형태가 아니라 사측이 제출한 서류와 보고서만으로 현장을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산업현장에서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도 고용부의 생색내기식 점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노동계 비판이다.

1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은 광주노동청(27명), 여수지청(8명), 목포지청(6명) 등 41명이 전부다.

이들은 산업 안전 관련 법률 준수 등 산업재해를 담당하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권한이 막강하다.

하지만 담당하는 사업장만 광주(6만곳)·전남(6만 7000곳) 등 12만 7000곳에 이른다보니 1인당 평균 3100곳 이상을 돌아다니며 안전 시스템을 점검해야 하는 실정이다. 산술적으로는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하루 11곳을 쉬지 않고 주 5일 동안 돌아다녀도 모자란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8년 광주지방 노동청에서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한 근로감독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까지 있었다. 근로감독관이 산업 현장을 찾아 안전 감독을 한다는 게 애초 불가능하다보니

사업자측이 제공하는서류와 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인력이 없으며 즉각 대응하기 보다는 한참 뒤에서 서류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고용부도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 근로감독관은 "담당 사업장과 업무량이 많다 보니 산재·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보다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많아 안전보다는 근로조건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점검할 때마다 관련법 위반 수도둑...결합기 점검=허술한 안전 점검은 고스란히 산업 현장에서 드러난다. 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에서는 수백 건씩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가 하면, 안전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전남에서만 7차례의 산업 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지난 2019년~2020년까지 3차례에 걸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에서 무려 139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19년 용접작업 과정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실시된 특별근로감독결과, 4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1건을 사법처리하고 167건에 과태료 1억 2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67건의 시정지시도 내렸다. 그 뿐이었다. 지난해 7월 설비점검 과정에서 일어난 추락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진행된 근로감독에서도 무려 20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 산소밸브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뒤 이뤄진 특별근로감독에서도 774건의 위반사항을 다시 적발했다.

노동청의 허술한 안전 점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흡한 안전 조치를 개선했다는 업체 말만 믿고 있다가 개선하지 않아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5월 파쇄기업체 사망사고 이후 광주지역 파쇄기를 보유한 291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전수 조사했다. 광주노동청은 이때 안전 장치를 갖추지 않은 일부 업체를 확인, 시정을 요구해 '개선을 완료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노동청의 시정 조치를 받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난 1월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고 애초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산업 재해로 사망 사고가 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지난해 2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숨졌다. 노동청은 지난해 8월 근로감독에서도 33건을 적발했고 지난 2월에도 13건을 적발했다. 예방 위주의 안전 점검이 아니라 사고 뒤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권오산 광주·전남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똑같은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는데 노동당국은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사후약방문식 점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첨단2단지 공영주차장 완공 16일 광주 북구 첨단2지구 근린공원 맞은편 완충녹지에 첨단2단지 공영주차장이 완공됐다. 문인 북구청장과 표범식 북구의회의장, 기업인 등이 주차장 준공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 교통사고 5분 뒤 신고...뺑소니로 구속

### 꼼꼼한 수사 거쳐 정황 증거 확보해 법원 영장 발부받아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5분 뒤 신고를 한 피의자를 도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광주서부경찰은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 A(73)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서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으

로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5일 후인 지난해 11월 23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즉각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내렸다

가 B씨를 발견한 주민의 구조요청에 119로 신고한 점, 범행 당시에는 시인하지 않았다가 이튿날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자백한 점 등을 들어 도주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사고 당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사고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내세워 도주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피의자가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충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

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 현장을 떠난 점, 인적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이상 피의자가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쉽게 밝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경찰은 이후 A씨가 사고 직후 지인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했고 A씨가 차에서 내린 뒤 집으로 들어가는 중이라는 목격자 진술 등 A씨가 5분 동안 적극적인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제주 4·3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 335명 70년만에 누명 벗어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 한 피해자 335명이 한날에 다 함께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6일 국방경비법 위반 및 내란실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21개 사건으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정에 오른 피고인은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생존 수형인 2명으로 대부분 유족이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은 고(故) 박세원 씨 등 4·3 행방불명 수형인 13명에 대한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 1건당 10~20분씩 진행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검찰 구형 후 이례적으로 곧바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유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며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족대표로 발언권을 얻은 박세원 씨의 아들 박영수씨는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 저승에서 온 330여 명의 영혼에 절을 올리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금지라고 해 대신 지금 목례를 올리겠다"면서 목례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335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첫 재심 재판이 열린 2019년 이후 지금까지 4·3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371명이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연합뉴스

## '프로포폴 투약' 가수 휘성 징유 검찰,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가수 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유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수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1월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